

2018년도

특허청 정책 추진방향

2018. 2. 1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목차

Contents

1 일반 현황

2 지식재산 정책환경 및 정책 추진방향

3 2017년도 주요 정책과제

1

일반 현황





조직 : 1관 8국 52과 15팀, 3소속기관



정원 : 총 1,627명(본청 1,425명, 소속기관 202명)

('17. 12월, 명)

구분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3·4~4급	4·5~5급	6급이하	관리운영	계
계	1	23	98	1,074	388	43	1,627
본청	1	10	53	987	339	35	1,425
특허심판원	-	12	41	75	16	-	144
연수원	-	1	3	9	17	4	34
서울사무소	-	-	1	3	16	4	24

* **심사관** 1,028명(일반직 926명(4·5~5급 842명, 6급 84명), 전문임기제 102명)

* **심판관** 95명(4급 40명, 4·5급 55명)



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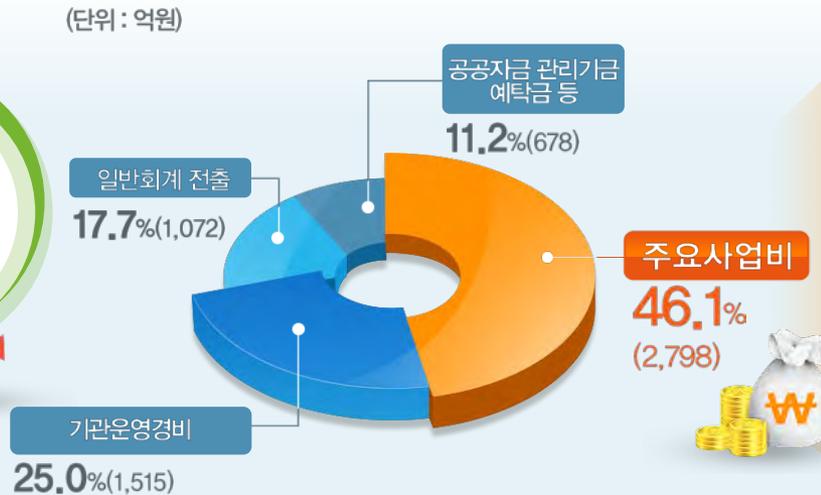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가 적용되어 100% 자체수입으로 세입 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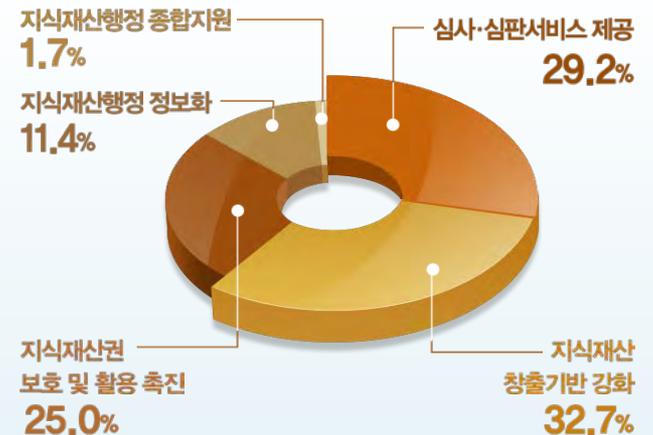
✓ '18년도 세입·세출예산은 6,062억원 '17년 대비 9.2% 증가



세출



주요사업비 구성



2

지식재산 정책여건 및 정책 추진방향



상상과 아이디어 중심의 소프트파워 시대로 전환

-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의 중요성 증대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변화



‘포켓몬 GO’와 지식재산권

VR기술(특허권), 상표권, 캐릭터(저작권) 등 전통적 IP들이 융합 → 하나의 새로운 지재권처럼 작용

중소 벤처기업의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보호 취약

- 중소 벤처기업의 아이디어 기술 탈취 피해가 증가하여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약화

기술 유출 탈취 피해 현황



-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우리기업의 기술혁신 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혁신성장을 위한 특허품질 미흡

- 지식재산 관련 양적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나 원천·표준 특허가 부족하여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지속

GDP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15)



4차 산업혁명 분야 표준특허 현황('16)



IP 서비스업이 영세하고 IP 기반의 창업 부진

- 높은 고용유발 효과를 갖는 지식재산 서비스업은 성장에 한계
- IP 기반의 창업과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시급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



지재권 비용 및 해외 특허출원 비용('15)



비전

지식재산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목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선순환 플랫폼 구축

4대
추진
전략

1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

2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

3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4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13개
중점
추진
과제

① 특허창출의 전 주기적
품질관리

②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표준 특허 확보

③ 공정하고 신속한
특허심판구현

④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⑤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주도

⑥ 경제·사회적 지식재산
격차 해소

⑦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⑧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⑨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⑩ 발명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⑪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

⑫ 미래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효율화

⑬ 발명 장려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



특허법, 상표법, 발명진흥법 등 총 9개

법률명	주요내용
특허법	특허출원·심사, 특허요건, 특허권의 효력 등을 규정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 실용신안등록요건, 실용신안권의 효력 등을 규정
상표법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요건, 심사, 상표권의 효력 등을 규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요건, 심사, 디자인권의 효력 등을 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배치설계권의 등록, 배치설계 심의조정위원회 등을 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행위(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등의 부정사용 등)와 타인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규정
발명진흥법	발명의 진흥, 지역지식재산센터,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 설립근거 등을 규정
변리사법	변리사의 자격, 변리사 시험, 등록, 징계 등을 규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명교육센터 설치, 학생발명 활성화,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등을 규정

3

2018년도 주요 정책과제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전 주기적 특허창출 관리체계 구축

- 특허창출의 모든 단계로 품질관리를 확대하고 모든 주체의 역량 강화

구분	단계별 지원			
	R&D	출원	심사 이전	심사
대상별 주요과제	R&D ▶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기업 ▶ 업종별 특허동향 분석 ▶ 중소기업 IP-R&D	특허업계 ▶ 자율 품질관리 환경 조성 기업 ▶ 특허심사동향 분석 ▶ IP 출원펀드 조성 대학·공공연 ▶ 특허관리체계 개선 ▶ 특허설계 지원	기업 ▶ 중소·벤처기업 대상 선행기술조사 결과 사전 제공	특허청 ▶ 심사인력 증원 ▶ 협력심사 확대 ▶ 선행기술조사 내실화
특허품질	발명품질	출원품질		심사품질

- (R&D 단계)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발명품질 제고
- (출원 단계) 전략적 특허설계 지원을 통한 출원품질 향상
- (심사 前 단계)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출원인에게 제공하여 차별화된 특허확보 전략 수립 지원
- (심사 단계) 심사 역량 강화를 통한 특허 심사품질 혁신

4차 산업혁명 기술·디자인에 대한 우선심사 시행

-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18.5)
 - ▶ 우선심사 최종결정까지 평균 5.7개월 소요되어 전체 평균 16.4개월에 비해 10.7개월 단축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활용한 디자인 우선심사 시행('18.1)



4차 산업혁명 분야 정부 R&D 혁신성과 창출 지원

-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
- IP 외환거래 조사분석 자료 제공하여
부처별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개선 대책 마련 지원



핵심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18.4)
 - ▶ (현행) 특허등록 후 1~3년차 70%, 4~9년차 30% 감면
(개선) 특허등록 후 1~3년차 70%, 4~20년차 50% 감면
-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신규 시행('18.4)
 - ▶ 중소기업·개인 대상 기준금액 초과시 납부총액의 10~50% 되돌려 줌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등 심판의 공정성 강화

-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및 심판품질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확대
 - ▶ 전문심리위원은 심판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의견제출 가능
- 심판관 임기·신분보장 등 독립성 보장 관련 규정 특허법에 신설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심판제도 개선

-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 ▶ 심판관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직권으로 조정 회부 가능
- 심판에서 적시에 증거를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

조직 및 인사 시스템 혁신을 통한 심판 전문성 제고

- 심판관 증원 및 심사인력을 특허심판원으로 재배치 추진
- 심판관 선발위원회 운영 및 심판관 장기근무 우대
 - ▶ 승진심사 시 심판경력을 고려하고, 심판관 직위공모제도 적극 활용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집행·구제수단 도입

-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등 조치수단 마련
- 특사경 업무범위를 영업비밀·디자인 침해 행위 수사까지 확장
-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세부지침 마련

중소·벤처기업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한 손해배상 절차 개선

- 악의적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침해자도 실시자료를 제시하게 하는 등 지식재산 침해·손해 입증부담 완화

위조상표 단속 강화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국민건강·안전, 대규모·상습, 온라인 사건에 대한 기획수사 강화 및 수사거점 확대
 - ▶ 특사경 지역사무소 : 3개소(서울, 대전, 부산) → 5개소(대구, 광주 추가)
- 영업상 특징적 외관 모방 행위 및 특정인의 성명, 초상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 조정위원 풀 확대, 1인 조정 도입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활성화

우리기업의 K-브랜드 보호 체계 강화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지원 확대
 - ▶ ('17)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 특허·실용신안 출원 추가 지원
- K-브랜드 도용 및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조기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 '공동방어상표' 개발·보급 추진 및 외국 전자상거래업체와 유통 단속 협력 확대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IP 분쟁 예방·대응 지원

- 해외 기술거래, 투자 사업설명회 등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출·도용 피해에 대한 선제적 보호 추진
- 한류 콘텐츠 관련 상품·서비스에 대한 IP 확보, 분쟁 예방, 수익화 전략 등 정보 제공
- 해외 전용 지재권 심판 보험 출시·지원('18.6) 및 '민간 자율형' 국내 전용 심판보험 개발·보급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의회를 통한 국제 IP 질서 변화 선도

- TM5·ID5 회의 국내 개최('18.6, '18.11) 등을 통해 지식재산 선진 5개국과의 협력 강화
- WIPO 지역사무소 국내 유치 추진 및 WIPO 고위급 인력 진출 확대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 강화
 - ▶ WIPO는 현재 5개 지역사무소를 '19년까지 단계적으로 11개까지 확대 추진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에 우호적인 글로벌 IP 환경 구축

- UAE와 특허심사협력을 확대하고 한국형 특허행정 서비스 중동지역으로 확산
 - ▶ IP 서비스 수출(450만불)에 이어 시스템 유지보수 및 컨설팅 계약 추진
- 對ASEAN 교역 확대에 대비해 IP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양·다자 협력체계 구축
- 개도국 대상 적정기술과 브랜드 개발 지원 및 글로벌 교육 콘텐츠 확산

여성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 광역거점별 '여성지식재산진흥센터' 설립
- 여성의 발명·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는 '생활발명코리아' 진행

지역지식재산센터(RIPC)를 통한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 기업 현장과 근접한 지역지식재산센터(27개)에서 IP 관련 상담·교육 실시
- IP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IP 애로 해결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확대

- 공익변리사 지원 대상을 청년 창업자, 다문화 가정 등으로 확대
-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법률구조* 제도 도입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심판청구료, 대리인 비용 지원
- 소셜벤처에 IP-R&D 등 신규 지원(10개 과제)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서비스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

- 분야별 조사 서비스 개방하여 민간 조사업체 육성
 - ▶ 민간 점유율(%): ('17)23 → ('18)32 → ('19)40 → ('20)45 → ('21)50 → ('22)50이상
- 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 추진
- 국가 R&D 결과물 선행기술조사 의무화 추진 등 선행기술조사 신규 시장 창출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으로 새로운 지식재산 서비스 창출

- KIPRIS^{plus}를 통한 데이터 확대 개방
 - ▶ 개방 상품수: ('17) 90종 → ('18) 미국상표공보 등 6종 추가
-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이 SMART3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응용 비즈니스 창출할 수 있도록 후속 개발 지원



IP 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지식재산 서비스기업 육성

- IP 서비스업 투자펀드를 조성(800억원)하여 민간 중심 IP 투자 확대
- 특허관리전문회사형 IP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하여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 ▶ NPE형 IP 투자펀드 조성(누적) ('17) 11개 → ('18) 15개

지식재산 서비스업 성장 기반 확충

- 특허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술이전 과세특례 개선 등 지식재산 분야 세제개선 추진

		현행('17년)	개선추진(안)
특허 출원·등록 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25%)
특허 조사·분석 비용 R&D 세액공제		-	중소기업(25%)
기술 거래 과세 특례	기술취득 비용 세액공제	중소(10%), 중견·대기업(5%)	중소·중견·대기업(25%)
	기술이전 소득 세액공제	중소·중견(50%)	중소·중견(50%), 대기업(10%)
	기술대여 소득 세액공제	중소기업(25%)	중소·중견기업(25%)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상시 지식재산 대응체계 구축

- **민간 중심의 특허공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 ▶ ('17)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한 특허공제 법적근거 마련 → ('18) 시행령 개정 및 특허공제 운영요령 제정 → ('19) 특허공제 시행
-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바우처 사업 시행**
 - ▶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 등



지역의 지식재산 강소기업 발굴·육성

- **지역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육성**
 - ▶ 신규 130개사, 누적 510개사
- **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지식재산경영 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 제공**
 - ▶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누적, 개사) : ('17) 203 → ('18) 280



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체계 활성화

-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촉진하는 IP 디딤돌 프로그램 확산**
 - ▶ IP디딤돌 지원(건) : ('17) 758 → ('18) 930
- **IP 나래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이 안정적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재권 컨설팅 제고**
 - ▶ IP나래 지원(건) : ('17) 294 → ('18) 420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및 사업화 지원

- **지식재산 데이터 무상제공의 자격요건 완화* 및 무상 제공기간 확대(3 → 5년)**
 - ▶ (현행) 예비 또는 3년 이내 → (개선) 예비 또는 7년 이내 창업자·스타트업
- **중기부와 협력하여 지식재산 특화 스마트창업작터 운영**

지식재산 금융 지원 강화

- 창업 초기기업의 IP 금융 확대
 - ▶ IP 금융 규모 : ('17)3,670억원 → ('18)4,500억원 → ('22)1조원
-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단계별 자금 수요에 따른 투·융자 지원 강화
 - ▶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금액(누적): ('17)1,600억원 → ('18)1,800억원

민간 중심으로 지식재산 금융 저변 확산

- IP 금융 취급 은행을 확대*하고 대상을 상표·디자인권으로 확대
 - ▶ ('17)산업·기업·국민·신한·우리은행 → ('18)하나·농협은행 추가
- 벤처투자펀드의 IP 직접 소유 허용 등 IP 직접 투자 활성화
- IP 가치평가기관 민간기관 중심으로 확대 및 전문영역 특화 추진
 - ▶ ('17)15개 기관(민간5) → ('18)18개 기관(민간8)

IP 금융연계 가치평가 인프라 확충

-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을 다변화하여 맞춤형 가치평가 제공
- 가치평가 교육을 통한 IP 가치평가 인력 양성 지원



지식재산 거래 촉진 기반 조성

-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IP-PLUG)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심으로 확대
 - ▶ IP-PLUG 기술분야: ('17)8개 → ('18)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10개



기술수요에 기반한 지식재산 거래 지원

-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확대
 - ▶ ('17)2개 기관(시범) → ('18)30개 기관
- IP-Market 정보를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민간 지식재산 거래회사에 개방



청소년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

- ‘발명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시도 교육청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발명교육 실시
- 광역지자체에 ‘광역 발명교육 지원센터’ 설치 추진
- 지식재산일반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고 교과 홍보 및 교과연구회 운영
- 교육대·사범대에 발명·지식재산 과목 개설 확대

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 강화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에서 IP-R&D 방법론 교육 실시
- 산학협동형 발명대회 운영 효율화 및 후속 지원 강화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대학원 설립 검토



현장 중심의 지식재산 실무능력 제고

- 발명특허 특성화고 학생들의 기업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 대학생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역 기업 취업 지원
-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확산 및 운영과목 확대*
▶ ('17)11개 → ('18)14개

출원인의 요구에 부응한 변리사 제도 개선 추진

-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 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추진
- 변리사 실무교육 강화 및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 활성화



미래 신기술 보호를 위한 선도적 지식재산 연구 강화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

- ▶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17.7 출범)에서 도출된 이슈별(AI 창작물, 3D 프린팅 파일 등) 세부검토 추진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특허 보호체계 개선

○ 온라인 유통되는 SW에 포함된 특허기술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 ▶ (현행) 타인의 특허기술을 도용한 SW를 기록매체에 저장해 유통하면 특허침해이나 온라인 유통은 불명확

○ 새로운 특허침해 유형을 검토하고 적절한 권리보호 방안 마련

- ▶ 국경을 넘는 침해, 복수 주체 침해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특허·상표·디자인 분류체계 개선

○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특허분류체계 개편

○ 신기술분야 상품을 분류 DB에 반영하고 주요국과의 상품분류체계 비교·분석 실시

○ 디자인 분류체계 정비 및 新 디자인 물품분류체계 도입 추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특허정보시스템 고도화 전략 수립

- 특허행정 정보화 중장기 마스터플랜인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지능정보기술의 특허정보시스템 적용 타당성 분석 및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



지식재산분야 지능정보기술 적용 시범사업 추진

- 특허검색 및 상담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 시범사업 실시
 - ▶ ('17) (검색/상담) 분석·설계 → ('18) (검색/상담) 파일럿 모델 개발 → ('19) (검색) 모델 개발 완료, (상담) 서비스 고도화
- 특허명세서 정보를 인공지능이 인식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민간에 개방하는 사업 수행

발명 친화적 환경 구현을 통한 국민적 발명 붐 조성

- ‘나도 발명가’ 범국민 캠페인 추진
- 지역 지식재산 페스티벌 개최 및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 신설(’18.3)
- 발명의 날 유공자 선정을 ‘발명인’ 중심으로 개편



직무발명 제도 개선 및 도입 확산

- 비과세 한도(현행 연 300만원) 인상 등 직무발명 보상금 세제개선 추진
- 직무발명 보상대상 확대 및 직무발명 승계절차 간소화
 - ▶ 사용자-종업원 간 예약승계규정 있는 경우 발명 완성시 사용자가 자동으로 권리 승계
-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개선
 - ▶ 국가승계 기한 설정, 이중양도 근절을 위한 신고·제재 규정 신설 등



지식재산 허위표시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 추진

- 국민안전 관련 특허 허위표시로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 실시
 - ▶ 치과한의원 등 전국 소재 32,000여개 병원 및 생리대·유아용품 등 생필품
- 온라인 사업자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허위표시 적발 건에 대한 자체 시정조치 체계 구축
 - ▶ (특허청) 목록 전달 → (쇼핑몰) 자체 시정 → (특허청) 미시정 건 행정지도

국민 참여를 통한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

- 참여형 지식재산 보호 인식 프로그램 강화
 - ▶ 지식재산 보호 체험교육, 위조상품 사례 교육 등
- 지식재산 보호영상 및 카드뉴스 공모전 개최
- 정품사용 문화를 전파하는 전국순회 캠페인 개최
- 지식재산 보호 공익광고 제작·송출 및 전방위 홍보 추진

감사합니다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